

데스크칼럼

이성오

서울취재팀장



지난해 말 전직 국무총리와 전직 국회의장, 전직 여야 정당 대표들은 ‘정치 실종’을 비판하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연 ‘비상사국 기자회견’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점이 선진국의 문턱에 왔는데, 우리 정치가 뒷다리를 붙잡는다. 잘못하면 대한민국을 추락시킬 위기까지 가져왔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22년 11월 국내 주요 4대 학회(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학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악화한 분야로 ‘정치적 양극화’를 꼽았다. 또 설문 참여자 62.6% (636명 중 398명)가 정치적 양극화 해소 노력이 오히려 전 정부보다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은 30건의 탄핵안 발의(국회의결 13회)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41회를 넘었다.

이제는 정치권 내의 갈등에서 그치지 않고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번지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가 건립 기반까

기고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실종된 정치’ 해법은 있나

지 흔드는 양상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법안이나 정책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서로 비방하는 일이 잦아졌다. 존종돼야 할 사법부 판결까지 개별 정치인은 물론 정당 지도부까지 원색적인 비난도 잦아졌다.

정치적 갈등의 심화는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긴다. 상호 불신과 대립이 커지면서 각 정당 내에서도 극단적인 강경파들이 득세한다. 탄핵사태가 종료됐는데도 여전히 거리의 시위와 집회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아짜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현재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상대방을 탓한다. 저쪽이 심하게 나오니 우리라고 다른 도리가 있겠느냐고 강변한다.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답변도 있다. 세계는 지금 갈수록 빈부 격차가 커지고, 기후 변화는 더 심각해지며, 표현의 자유까지 공격을 받는 사례가 늘고, 곳곳에서 전쟁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민주주의 위기’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사태의 원인으로는 ‘급격한 사회변화’가 꼽힌다. 석학들은 현대사회의 이런 특징을 ‘디지털 혁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의 위력을 점점 더 커지고,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진단한다.

현대인들은 이런 현상에서 불안감과 무력감이 커지는 데, 대부분은 이를 ‘사회의 탓’으로 여긴다. 이것이 양극단의 정치 선동과 연결돼 ‘극단주의’가 자란다. 정당 내에서도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사회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선 상대편 잘못을 밝혀내고 단죄해야

그것은 청년혐오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미혼남녀 결혼 행사 건수’는 최소 54곳이다.

사업을 진행했던 지자체는 매칭률, 결혼율 등을 성과지표로 삼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당사자인 청년층의 반대에도 이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요즘 청년이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적다는 점, 바로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청년층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에서는 이 사유가 나름 명분을 갖는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라면 지역 일자리 정책의 확대와 보편복지, 교통문화 인프라 개선 등이 더욱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이다. 이 사업에 있어 인구 유출을 이유로 드는 지자체가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로 참가자의 신원을 관이 보증한다는 것.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경제활동에 대한 증명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주로 경제적 요건을 확인한다.

기본적으로 주선 사업은 모두에게 열린 정책이 아니다. 이는 결혼의 계급화를 부추긴다. 지역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얻은사람 만이 지역에 살고 그 사람들만이 이 사업에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하는 지역 청년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쉬울까? 주로 경제적 여건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춘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결혼정보업체가 되고자 지자체가 너도나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저출생은 불안정한 일자리, 교육과 노동, 돌봄 등 총체적 사회 불평등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사회문화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여기에 SNS에서 유통된 ‘가짜뉴스’가 사회 불신을 가중하고, 양 극단의 힘을 얻은 선동가들이 판을 친다. 극단적 세력이 득세할 때 합리적 사고는 길을 잃는다. 마치 나치 독일의 하틀러가 갈수록 궁핍한 사회에서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면 현안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규범이지 만병을 치료하는 약이나 의술이 아니다. 과도하게 법에 의지하는 사회는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되려 퇴행한다. 법조계의 한 일로는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일들을 법에 자주 의존하는 행태는 총칼을 들고 싸우는 원시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정공방이 많아지면 국민은 정치에 등을 돌리게 된다.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이 커진다. 이를 유럽에서는 ‘탈(脫) 민주주의’, ‘탈(脫) 정치’라고 부른다. 사회적 모순과 갈등은 애써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훌륭한 정치가 없으면 사회는 퇴행하고 국가는 추락한다.

정치는 치열한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화합을 끌어내는 ‘예술’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입법권, 거부권, 탄핵권 등 법적인 권리 행사만 내세울 뿐 일말의 양보도 타협도 없다.

정치 부재에 힘든 것은 민생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만 터진다.

과연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정치 화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국민은 새로운 정치, 내 삶에 유익한 건강한 정치가 살아나길 고대한다.

사설

한우 구제역에 이어 돼지 구제역이라니...

전남에서 한우 구제역에 이어 돼지 구제역까지 발생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구제역이 발생한 무안 한우농장과 각각 1.8km, 1.5km 떨어져 있는 무안 돼지 농장 2곳의 일부 돼지가 지난 11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제역 종식 선언을 앞두고 반경 10km 방역대 내의 해제 검사를 하는 도중 이 곳 두 농장 축사 바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정밀검사 결과 12마리의 돼지가 구제역에 무증상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지난달 23일 영암 한우농장에서 14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후 19일 만으로 돼지 구제역은 2018년 4월 이후 국내에서 7년 만이다.

특히 전남은 구제역이 첫 발생했던 1934년 이후 91년 간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아 청정 지위를 유지해오다 이번에 한우 구제역에 이어 사상 첫 돼지 구제역까지 발생한 것이다.

현재 방역 당국은 돼지 첫 발생농장인 만큼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사유종인 돼지 547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고 한다.

문제는 돼지 구제역의 경우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는 데 있다. 돼지는 소에 비해 바이러스 검출량이 최소 1000배, 최대 3000배 가량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생장소 또한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첫 발생지인 무안은 75개 양돈 농가에서 돼지 24만5100여 마리를 사유종으로 이는 전남 전체 양돈 농가 480곳의 15.8%, 사육 두수 138만 6500마리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사육 두수만 놓고 볼 경우 2위 나주의 17만7295마리보다 7만 마리 가량 많은 전남에서 독보적 1위다.

더욱이 발생 농장이 지난달 중순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마쳤고 구제역이 발생한 한우농장과 접점도 없는 상황에서 무증상 감염돼 방역당국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전남도는 무안 발생 농장 3km 방역대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이동제한 기간을 3주간 연장하는 등 확산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 동구 고향사랑 답례품 특색있네

광주 동구의 특색있는 고향사랑 기부답례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답례품은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의 30% 이내에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광주 동구는 지난해 24억여원을 모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고향사랑기부금 1위를 달성했는데 이 비결중 하나가 답례품에 있다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인 지난 2023년에는 9억2000만원을 모았다.

이같은 성과에는 광주 동구 공무원들의 공이 컸다고 한다.

광주 구도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타 지자체와 달리 특산물과 공산품이 부족해 이를 타개할 답례품 발굴을 위해 전통시장을 누비며 최적의 업체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부자들의 계속되는 주문으로 일손이 부족할 때는 택배 포장 지원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동구의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며 대박이 났다.

실제 답례품으로 선보인 남광주시장 내 자연축산의 삼겹살·목살이 연 말 모금이 집중된 지난해 12월 한달간 신청 건수만 7037건에 2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여기에는 답례품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기부자들 만족시킬 만한 품질 좋은 착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분석되고 있다. 기계가 아닌 칼로 직접 손질한 마트 구입 중량(600~800g)보다 넉넉한 국내산 1+등급 양돼지(1.3kg 이상)를 준 것이다.

또 ㈜한우비의 한우 등심과 안심, 광주축산농협의 한우·한돈 세트, 마한지의 양념 돼지갈비, 진선의 김치류, 제이에스바이오텍퍼의 훈제 통삼겹 바비큐·화장품류 등도 기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가성비 답례품이라고 한다.

답례품들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하나 둘 견인하자 남광주시장 내 다른 업체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동구청도 최근 ‘특미 참기름’, ‘해프랑 협동조합의 소내장 추어탕’, ‘최재호 김치’, ‘그린스토어의 흥어 무침’ 등 6곳을 추가했다.

답례품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체면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령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지)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취재수첩

청정전남 위상 되찾아야

이 승 흥

지역사회부 부장대우



지난 11일 무안군의 돼지농장 2곳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했다.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국내에서는 7년 만. 전남에서는 사상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지난달 13일 영암 한우농장에서 첫 발생한 구제역은 전남에서 모두 16건으로 늘었다. 영암 13건, 무안 3건 등이다.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이번에 발생한 2건을 제외하면 모두 소에서 나왔다.

이들 농장은 앞서 구제역이 발생한 무안 한우농장과 각각 1.8km, 1.5km 떨어진 곳에 있다.

두 농장 모두 구제역 자연(야외) 감염형체는 검출되지 않았고, 백신형체 양성률도 98.4%로 높아 백신

접종으로 방어능력이 생겨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영암과 무안의 한우농장에서 주로 발생한 구제역이 이번에 돼지에서 처음 발견돼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돼지 구제역은 소보다 전파력이 월등히 강한 데다 현재 개발된 백신의 경우 한체 형성률이 70%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남 10개 시·군에 내려진 구제역 심각 단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축산시장 개장도 보류하기로 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하루 빨리 구제역 사태를 종식하고 청정지역 지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하는 것이 과제다.

각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가축 사육 농가도 행사·모임을 자제하고 외부 차량 출입 통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방역에 있어 ‘방심은 금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